

이 자료는 2020년 9월 3일(목) 14:00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 시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

2020. 9. 3.

관 계 부 처 합 동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뉴딜펀드 조성·운용 방안 .....	4
1. 기본 방향 .....	5
2. 세부 내용 .....	6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6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9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	11
III.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	12
IV. 향후 계획 .....	14



## I. 추진 배경

◇ ①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②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③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 추진

- ① **[뉴딜의 성공적 추진]**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7.14)” →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될 필요

\*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7.14)”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이 제안됨

- 특히,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생태계\*” 구축 필요

\* 금융을 통해 민간자금이 뉴딜분야에 투입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 과정에서 실물경제 활성화 가속화 기대

- ② **[시중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시중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활용할 필요성 확대

\* M2 증가율(전년동기비, %): ('18.6) 6.1 ('19.6) 6.8 ('20.6) 9.9 (최근 10년 평균) 6.4

- 최근 급증한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지속 유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 경기회복 및 금융중개기능을 활용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뉴딜사업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

- ③ **[성과 공유]** 뉴딜 투자('20~'25년간 총 160조원)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제공

## 참 고

## 뉴딜펀드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유사 펀드 현황

◇ 뉴딜 펀드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펀드는 크게 ①모태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 ②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③필승코리아펀드(소부장)와 같은 민간 자발적인 테마펀드 등 존재

① **[정책펀드\*]** 정부·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투자

\* 재정의 위험부담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

○ 母子펀드 형식으로, 母펀드로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子펀드로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소부장 벤처펀드 등 조성·운용 중

< 주요 정책펀드 현황 (단위 : 조원) >

펀드명	母펀드 출자자	규모	주요 투자대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중기부 등	24.9	* '05~'19년간 조성규모 • 창업 초기기업 • 중소·벤처기업 등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중기부 등	6.0	* '20~'25년간 조성계획 •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기업
소부장 벤처펀드	중기부	0.1	* '20년 조성계획 • 소부장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펀드	산·기은 등	11.6	* '13~'19년간 조성규모 • 창업 초기기업 • 스케일업기업 등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산은	0.4	* '20년 조성계획 • 소부장 관련 기업

② **[인프라펀드]**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근거한 인프라펀드와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존재

\* 투자대상이 스마트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사업 포괄

**< 인프라펀드 유형별 비교 >**

구분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중심)
주무부처	• 기재부(금감원 등록, 기재부 통지)	• 금융위(금감원 등록)
투자대상	<b>• 한정적</b> *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운영 법인 한정 → 다만, 최근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이외 <b>다른 자산 투자</b> 펀드 전체자산의 30% 이내를 허용하기로 既 발표('20.7.23)	<b>• 광범위</b> *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운영 법인, 선박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법상 자원개발 전담회사 등
운용규모 ('19년말)	• 총 10개(5.9조원) 운영 * <b>공모 1개(2.1조원), 사모 9개(3.8조원)</b>	• 총 576개(47.8조원) 운영 * <b>공모 7개(0.1조원), 사모 569개(47.7조원)</b>

**③ [민간 테마펀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 등 민간의 소부장 펀드와 같이 시장 스스로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

- \* 민간이 수익성 제고, 투자자 수요 등을 감안, **특정분야업종** 등에 투자하는 방식
- \*\* NH-아문디자산운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19.8월 펀드 설정 → '20.8월 현재 약 1,900억원 규모 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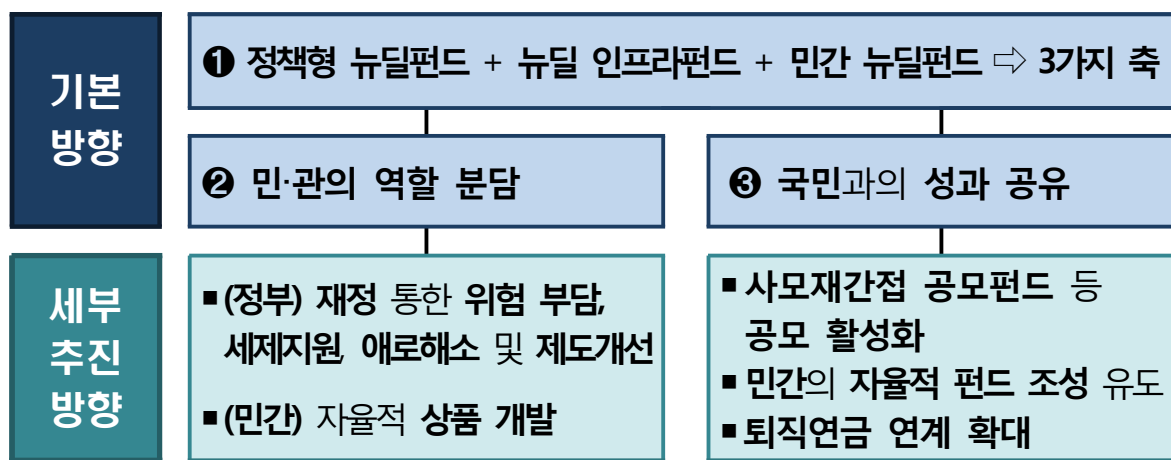
**<참고> 뉴딜펀드 관련 논의 경과**

-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제안(7.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 이후, 뉴딜펀드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여당, 관련 전문가** 등과의 **면밀한 검토 및 논의\*** 진행
  - \* 뉴딜펀드 정책간담회 개최(8.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주최), 정부내 관계부처·기관간 실무협의·업계 간담회(수시 개최)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 방안 논의 지속
- ◇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논의 (8.20일, 부총리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II. 뉴딜펀드 조성·운용 방안

- ◇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①3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 ②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③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

### 〈 뉴딜펀드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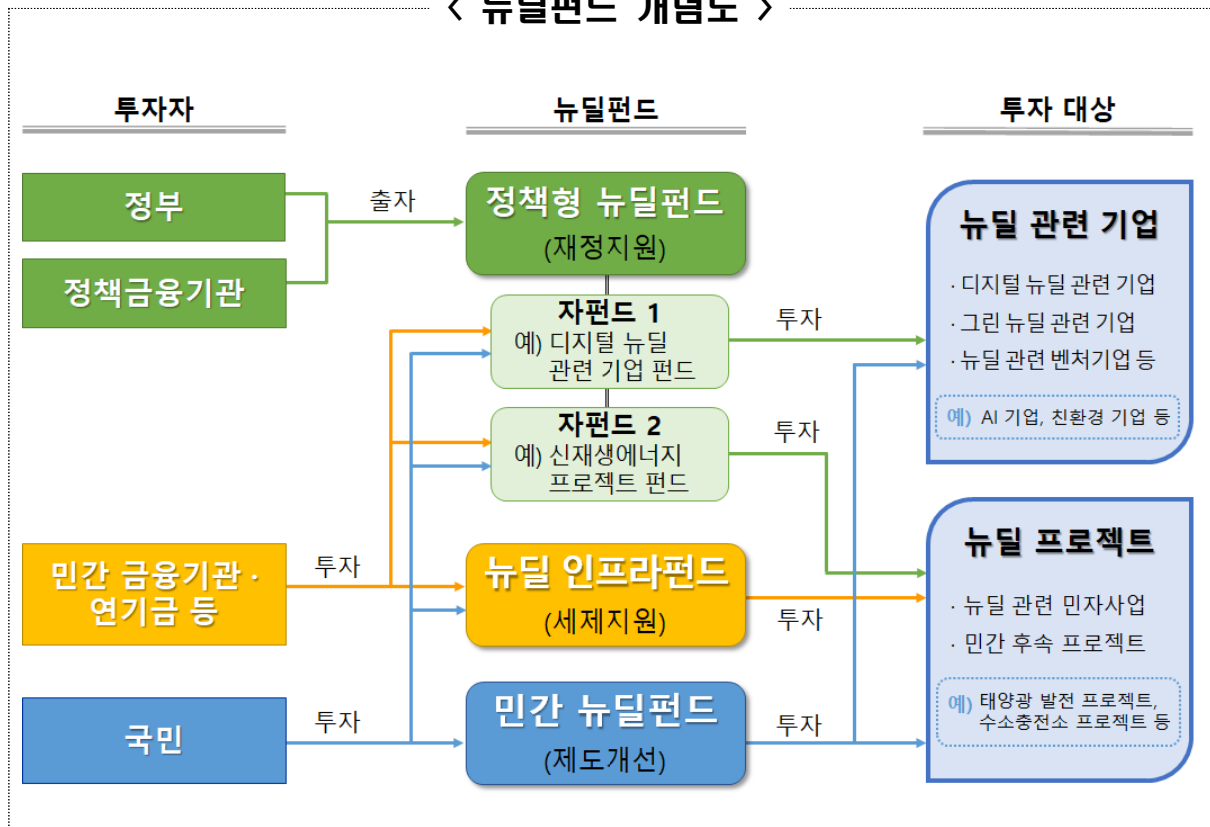
세부 구조	① 유형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② 조성 방안	■ 정부 등 출자 + 민간 자금 매칭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방식 + 민간 인프라펀드	■ 민간의 자발적 투자처 발굴 및 펀드 결성
	③ 유인 체계	■ 재정을 통한 후순위 출자 * 투자 위험 부담	■ 세제지원 ■ 프로젝트 발굴	■ 시장 여건 조성 * 현장애로 해소 지원 및 제도 개선
	④ 투자 대상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뉴딜 인프라사업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⑤ 성과 공유	■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 ■ 「국민참여펀드」 조성	■ 공모방식 확산 * 공모인프라펀드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 퇴직연금 연계	■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 1. 기본 방향

- ① **[3축 설계]** ❶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❷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 ❸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설계
- ② **[민관 역할 분담]**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설계
- ③ **[국민 성과 공유]**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하여 뉴딜사업 투자 성과 공유에 주력

〈 뉴딜펀드 개념도 〉



## 2. 세부 내용

### 1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 ① [조성방안] ①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펀드 조성 →  
②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 결성

① (모펀드) 공공부문이 5년간('21~'25) 7조원(연 1.4조원) 조성(전체의 35%)

\* (정부) 5년간 3조원(연 0.6조원), (산은·성장사다리펀드) 5년간 4조원(연 0.8조원)

② (자펀드)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21~'25) 20조원(연 4조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

#### <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

투자자	투자목적	비고	재원규모
정부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	·투자위험 부담	5년간 3.0조원(연 0.6조원)
정책금융기관			5년간 4.0조원(연 0.8조원)
은행·연기금 등 일반 국민	·투자 수익 창출 등	·자펀드 조성시 민간 매칭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	5년간 13.0조원(연 2.6조원)

- ② [유인구조] 모펀드의 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③ [투자대상] 민간의 창의성·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①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되,  
②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 설정

- ① (투자대상 범위) ①뉴딜 프로젝트와, ②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예시) >

- ① 뉴딜 관련 민자사업 (예: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 ②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예: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 ③ 뉴딜 관련 프로젝트 (예: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 ④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방법 (예시) >

-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 ② (투자기준 마련)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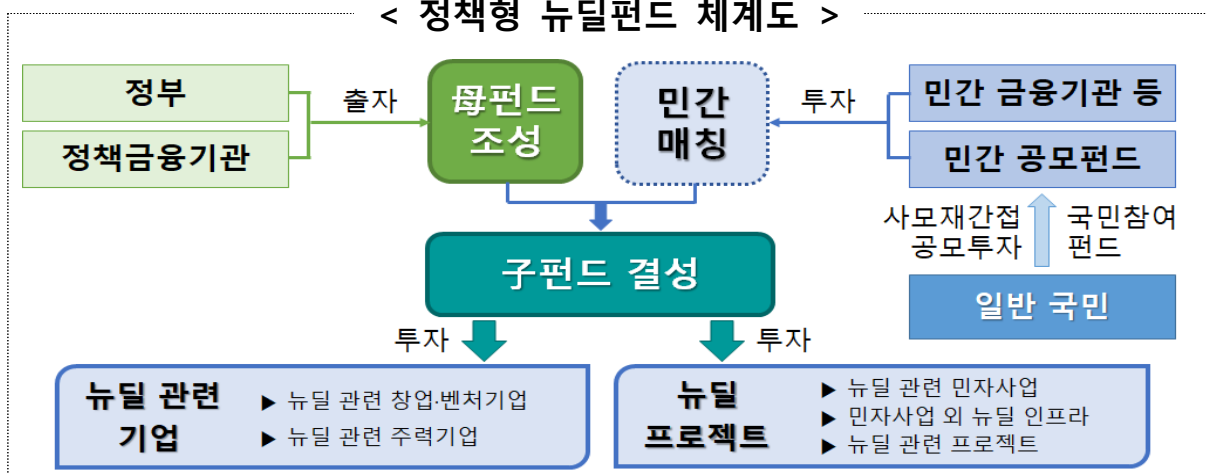
구분	분류 기준 (예시)
디지털 뉴딜	■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운영 중인 혁신성장 대출기준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큰 분야(첨단제조·자동화,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그린 뉴딜	■ 녹색인증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기후기술 분류 체계'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

- 4 [성과공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 우대 추진(예: 가점 부여)

\*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구성에 참여 →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

-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 조성

<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도 >



- (투자형태) 뉴딜분야에 대한 효과적 자금공급을 위해 ①프로젝트 펀드, ②블라인드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 ① (프로젝트펀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기간 및 위험추구 정도 등에 따라 자금을 선별하여 모집·투자

\* 프로젝트(기술인수, 전략적M&A 등) 선정 후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대상이 명확하며 현금흐름이 예측가능한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

- ② (블라인드펀드\*) 뉴딜분야 관련 산업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자금 공급

\* 자금모집 후 다수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로, 현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아도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에 용이

- (펀드구조) 뉴딜분야별 투자리스크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 등 자펀드 구조를 차별화

< 뉴딜 분야별 자펀드 구조 (예시) >

뉴딜분야별 사업성리스크 평가(예)	그린에너지 펀드 - 장기 투자 - 투자위험 高	스마트물류 펀드 - 중기 투자 - 투자위험 中	이차전지 펀드 - 단기 투자 - 투자위험 低
자펀드 정책자금 비중(예)	<div>민간자금 60%</div> <div>정책자금 40%</div>	<div>민간자금 70%</div> <div>정책자금 30%</div>	<div>선순위(개인투자)</div> <div>민간자금 85%</div> <div>정책자금 15%</div>

- (펀드주관) 보다 효과적인 뉴딜펀드 운용 등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경험이 축적된 성장금융·산은이 주관

- (가이드라인)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을 정비·재분류하여 우선적으로 뉴딜 투자에 활용\*

\* 既 마련된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중 디지털/녹색 관련 선정 기준을 우선 활용하고, 이후 정부 투자 가이드라인 활용

◇ ❶세제지원 확대, ❷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❸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① [조성방안] ❶정책형 뉴딜펀드, ❷민간 자원의 인프라펀드

(既운용 중인 펀드\* + 신규 펀드) 등을 활용하여 조성

\* 현재 민투법상 인프라펀드(10개, 5.9조원)와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576개, 47.8조원)

② [유인구조]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 유인 제공

○ (세제지원)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

- (대상) 뉴딜 인프라<sup>1)</sup>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sup>2)</sup>

\* 1)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범위를 규정하고, 심의를 통해 지속 보완  
2)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 (규모)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9%)

○ (재정지원)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시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 우선 분담

-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sup>1)</sup>, 해지시 지급금<sup>2)</sup> 등을 통해 위험 부담 지원

\* 1) 민자사업 시행자 대상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 중(한도 5,000억원) → 인프라 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 제공 시, 산기반신보를 통해 보증 지원 가능  
2)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既투입자금 등을 환급

③ [투자대상]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되 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 지속 발굴

### < 뉴딜 인프라사업 (예시) >

디지털 뉴딜 관련	그린 뉴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li> <li>• 스마트 공동물류센터</li> <li>• 데이터센터</li> <li>•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li> <li>• 그린 스마트 스쿨</li> <li>• 수소충전소 확충</li> </ul>

#### < 참고 > 해외사례

- ◇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외부 데이터센터를 리스하는 방식(코로케이션) 확산 →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임대 기업 고속 성장 중\*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14~'19년) : (에퀴닉스) 18%, (디지털리얼티) 15%
- ◇ (5G망) 미국 4대 통신사는 5G망을 임대 사용 → American Tower\* 등 민간의 셀타워 리츠 펀드(통신사에 통신타워 임대를 통해 수익 창출) 성장 지속  
\* American Tower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14~'19년) : 13%

#### ④ [성과공유] 기관투자자 중심(사모)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 유도

-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 우대 추진(예: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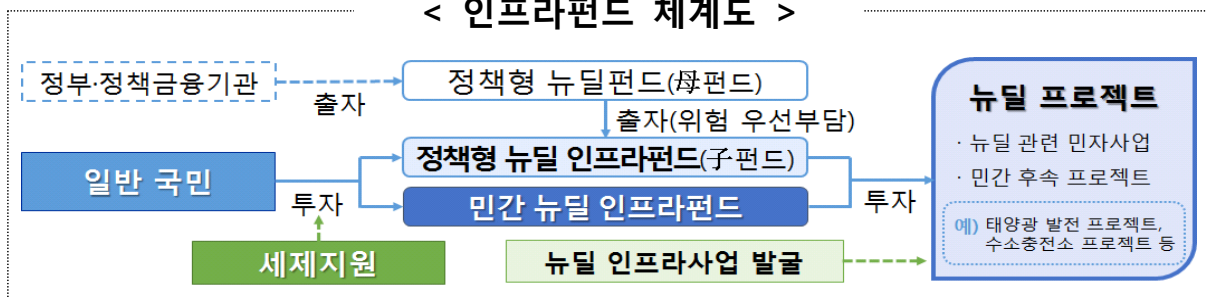
\* 민투법상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既발표(7.23)된 규제완화 병행 추진: 차입한도 상향(자본금의 30→50%), 투자대상 확대(자산의 30%내 사회기반시설 외 투자 허용) 등

-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 확대 기반 마련

\*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 구체적인 펀드 설계시 국민의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존속 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5~7년) 개발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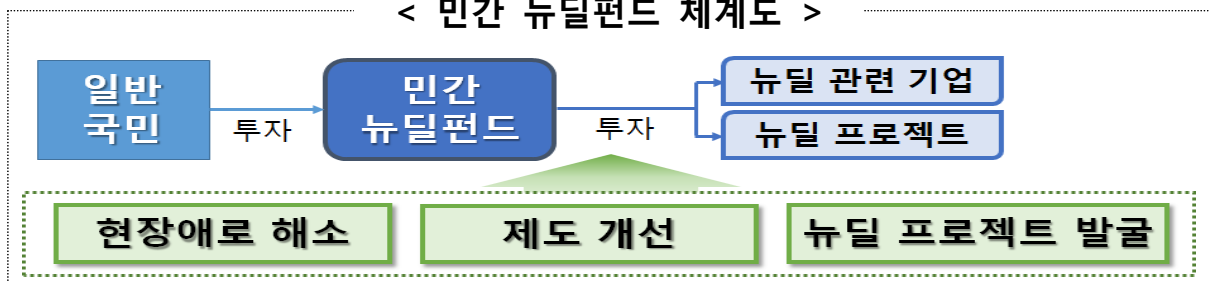
#### < 인프라펀드 체계도 >



◇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뉴딜펀드 붐업 여건 조성

- ① **[조성방안]** 금융회사가 高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
- ② **[유인구조]**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
  -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하여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 \* (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 민원 제기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추진
  - RE100<sup>1)</sup>·ESG 투자 활성화<sup>2)</sup>,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 \* 1)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 추진 등
    - 2) (예)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투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 ③ **[투자대상]** ①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②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
  - 뉴딜업종 內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한국거래소)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④ **[성과공유]** 국민은 시장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高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 (예) [수익성 중심] 데이터 활용 AI 개발기업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  
[안정성 중심]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

< 민간 뉴딜펀드 체계도 >





### Ⅲ.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

□ (정책금융 역할 확대)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혁신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여건 조성

○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

\*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산·기·수은 및 신·기보 기준)  
: ('19년) 8.4% → ('22년) 10% → ('25년) 12%

○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 공급 (5년간 100조원)

\* ①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산은, 1조원)  
②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산은·기은·수은, 69조원)  
③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신보, 30조원)

○ 「혁신기업 1,000」 선정시 “뉴딜 테마” 세션 신설을 통해 뉴딜분야 기업 중점지원 여건 조성

\* '20.4분기 중 선정예정인 총 「168개+α」 혁신기업 중 일정수준(예: 60% 이상)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발표할 계획

□ (민간투자 여건 개선) 뉴딜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

○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

\* (은행)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 적용  
(보험)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 위험계수 하향조정  
(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적극적 해석 운용)



- (뉴딜 PF유동화 지원)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 강화
    -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 인하(0.2% → 0.1%) 추진
    -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뉴딜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PF-ABS 신용보강 제공 추진
- \* 현재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인프라(정부 발주 非사회기반시설, 민간 발주 뉴딜 프로젝트) 건설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보 등 활용 불가
- (금융권의 뉴딜지원 확대)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

**< 참고 > 5대 금융지주 뉴딜분야 금융지원 추진 계획(9.3일 발표, 신한지주는 9.7일)**

⇒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여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

- (신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
- (KB) 그린스마트 스쿨, SOC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NH)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
- (하나) 스마트 산단, 5G 설비투자 및 데이터 센터,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조성 지원 등
- (우리) DNA(Data·Network·AI) 생태계 활성화, SOC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그린에너지

-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

## IV. 향후 계획

- ◇ 뉴딜펀드가 빠르게 민간에 안착되고 금융권의 뉴딜분야 투자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가. 뉴딜펀드 조성·운영

- **[조속한 상품출시 준비]**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 추진
  - 재정 수반 사항은 '21년도 예산안에 반영\*(9.3일 국회 제출)하고,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운영
  -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21년 정부 출자분 0.6조원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민투법 등 관련 법령은 금년 중 개정
  -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의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
-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중 사업설명회 추진
- **[사업발굴]** 민간의 자발적인 뉴딜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①뉴딜 사업 중 민자 추진 가능 사업 및 ②수익성이 높은 뉴딜 관련 민간프로젝트 지속 발굴

### 나.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 **[정책금융 역할 확대]** 뉴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뉴딜테마의 혁신기업을 조속히 선정
- **[민간투자 여건 개선]**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뉴딜 PF유동화 지원]** 보증료 인하, 신보 특별계정 신설 등 PF-ABS 발행 활성화를 위한 작업 마무리

## 참 고

## 세부 추진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추진기관
<b>【 정책형 뉴딜펀드 】</b>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9월	금융위 등 관계부처
▪ '21년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분 반영	~12월	기재부 금융위 (산은 등)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21.1월 ~	금융위 (산은 성장금융)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	~'21년초	금융위 (산은 성장금융)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운용	'21년 ~	금융위 (산은 성장금융)
<b>【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b>		
▪ 뉴딜 인프라 기준 및 뉴딜 인프라 심의제도 마련	~9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12월	기재부
▪ 공모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민투법 개정	~12월	기재부
▪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21년초	고용부 등 관계부처
▪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 발굴	지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b>【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b>		
▪ 뉴딜 프로젝트 분야별 사업설명회	10월 ~	금융위 등 관계부처
▪ 뉴딜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기반 마련	~12월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 현장애로 해소지원단 운영	지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 나.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정책 과제	추진시기	추진기관
<b>【 정책금융 역할확대 】</b>		
▪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	'21.1월 ~	금융위 (산은)
▪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	'21.1월 ~	금융위 (산·수·기은)
▪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	'21.1월 ~	금융위 (신보)
▪ 혁신기업 1,000 선정(뉴딜테마 세션 신설)	~12월	금융위
<b>【 민간투자 여건개선 】</b>		
▪ 뉴딜분야 PF투자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 대상 PF투자에 대해 필요시 유권해석)	수시	금융위 금감원
▪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 위험계수 하향조정	~'21년초	금융위 금감원
▪ 종합금투사업자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	~12월 (입법예고)	금융위 금감원
▪ 증권사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 가중치 조정	~12월	금융위 금감원
<b>【 뉴딜 PF유동화 지원 】</b>		
▪ 민투사업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보의 유동화 보증료 인하	~'21.1월	기재부
▪ 신보 특별계정 신설 및 PF-ABS 신용보강 제공 추진	'21년 초~	금융위 (신보)